

## ■ 정책동향

### 산업자원부, '99대체에너지 보급자금 용자

산업자원부는 세계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대체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2006년까지 국내 총 에너지의 2%(97년말 현재 0.8%)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할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시설에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33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지원분야는 태양열온수기, 태양광에너지, 소수력 에너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석탄이용기술, 풍력에너지 등 8개 분야이고, 지원조건은 소요자금의 90% 이내이며 이번에 지원되

는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리 5.5%로서 지난해(연리 7%)보다 1.5% 하향 조정하였고, 연간지원 한도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동일사업자당 자금이용 규모를 확대하였다.

대체에너지 보급현황은 '98년말까지 태양열온수기 약 17만기, 태양광 이용시설 2,500kW, 풍력 발전시설 1,600kW, 폐기물 이용시설 450개소, 소수력발전시설 37,000kW, 바이오 이용시설 100여기가 공급되고 있다.

### 산자부, 기계부품 신뢰성평가 센터 설립

산자부는 각종 기계류부품의 기술 및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국산화된 제품이 신뢰성 결여로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덕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내에 기계류부품 신뢰성평가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 센터는 700평 규모로 정부 예산 80억원, 민자 32억원 등 총 112억원을 5년간 투입해 설립되며 우선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계류 핵심부품 31종을 중심으로 신뢰성 평가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신뢰성평가센터는 국내기업의 제품개발 과정에서 각종 신뢰성 시험, 불량원인 분석 및 개선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 국산기계류부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한단계 올리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뢰성평가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은 그간 국산화된 제품이 수요자로 부터 제품의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데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ISO(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규격에서 정한 각종 시험·평가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자금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등 애로를 덜어주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신뢰성평가센터의 설립으로 무역역조 개선 효과 30억달러, 국산 기계류부품의 수출효과

10억달러, 국내에서 ISO규격 인증시험 가능효과 5억달러,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5억달러 등 총 60억달러의 효과가 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선진국들의 경우 독일 TUV, 프랑스 CETIM,

일본 MEL 등 시험 및 품질관리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금년중 반덤핑·상계관세 등 국내외에서 늘어나고 있는 통상마찰로부터 자금·정보 등의 제약으로 대처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설치된 산업피해연구제상담실을 통하여 구제 신청 단계에서 완료단계에 이르기까지 행정적·기술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한편,

해외에서 국내기업이 반덤핑 등을 제소당했을 경우에도 관련자료 수집 및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산업피해구제 제소에 따른 비용 지원 예산규모를 2.5억원, 건당 지원한도도 3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금년중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와 금년 6월말로 예정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 등으로 역외국으로부터 수입에 따른 산업피해 발생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덤핑 조사 및 판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정비와 개도국과의 교역증대 및 국내 서비스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확대에 대응하여 상계관세제도 및 유통·무역분야 세이프가드제도의 수행기반을 금년내에 정비하고,

현재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 분산되어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관련 규정의 통합 등 법령 정비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와함께 산업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에 추가하여 사전적 방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피해 우려 품목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사사업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WTO체제 발족후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심화와 미국·EU 등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수단으로서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산업피해구제제도 활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중국·호주 등 주요국의 산업피해구제 기관과 정례협의회 운영을 통한 협력 강화와 WTO 뉴라운드 협상에도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10대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1.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의 완벽한 수행
2. 불공정수출입행위 조사제도의 개선
3. 산업경쟁력 조사사업의 착수
4. 상계관세제도의 수행기반 구축
5. 서비스 세이프가드제도의 수행기반 구축
6. 산업피해구제관련 법령체제의 정비
7. 조직의 정비 및 인력의 전문화 추진

- 8. 중소기업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
- 9. 홍보·교육사업의 확대

- 10. 국제통상과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추진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경영혁신 컨설팅 실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체질개선을 위해 금번 총 360백만원을 투입, 지역별 주요 컨설팅업체를 활용하여 200개 중소기업에 대해 무료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경영혁신지도까지 연계시키는 「중소기업 경영혁신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기청은 그간 기술지도 위주로 중소기업의 지도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99년도 부터는 IMF 사태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술지도 외에 생산·판매·재무·노무관리 등 경영혁신 분야의 지도를 포함하는 경영혁신 컨설팅을 '99. 4월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의 이번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영컨설팅을 받을 수 없었던 중소기업들의 경영상의 문제점 해소, 지도전문가의 경험에 의한 성공 사례의 타기업접목,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노력조장 및 경영관리 합리화 도모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 744사 확정

중소기업청은 '99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지원업체로 744업체를 선정, 4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이란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정부가 출연하는 기술자금이다. 담보가 필요 없으며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1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매년 5%)으로 지원금액의 30%를 상환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3월에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착수금을 먼저

지급받게 된다. 또 하반기 중간 점검결과 기술개발 진행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성과금으로 받는다. 업체당 평균 5,300만원이 지원되며 업체별 지원액은 최고 8,600만원에서 최저 3,100만원까지다.

올해 선정된 업체들의 기술분야별 현황은 기계분야가 199개(26.7%)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분야가 160개(21.5%), 정보통신 148개(20.0%) 업체 순이다. 우대조치(가점부여) 분야중 벤처기업이 242개사,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이 62개사, 수출전략 업종으로 13개 자동차 부품업체가 선정되었다.

소기업의 경우(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 전체 선정업체(744개)의 80%인 593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번 지원업체 선정은 중기청이 지방청에서 심사평가한 추천업체를 대상으로 타 기관의 지원등 중복여부를 검토한 후 '중소기업 기술지원협의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올 지원대상

선정은 지원업체의 심사, 평가 및 협약체결까지 기업편의 위주로 개선되어 지난해에 비해 2개월 앞서 결정되었다.

한편 올 지원업체에는 2,593개 업체가 2,327억원을 신청, 지원금액 4백억원의 6배에 이르렀다. 이는 '98년 신청업체 2,145개사 보다 21% 증가한 것이다.

## 중소기업청, 공공기관 3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추진

중소기업청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방부, 조달청, 한전 등 69개 공공기관이 '99년중에 29.7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99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은 전년도 구매 실적 28.5조원보다 4.1%(1.2조원) 증가한 29.7조원 규모이며, 동 구매계획을 조기에 집행토록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4분기에 35.5%, 2/4분기에 31.3%를 구매하여 상반기중 66.8%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국무회의 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부진기관에 대하여 구매를 독려하는 등 조기구매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중소기업의 수주확대를 위한 세부계획

-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발주정보의 적극 제공
- 단체수의계약 및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 연간 단가계약 활용확대
- 적정가격에 의한 구매
- 특정상표 등의 지정제한 금지
- 품질향상을 위한 조치 강구
- 신기술개발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물품구매 예시제의 실시
- 공사자재의 구매
- 여성기업 및 소기업의 수주기회 증대
-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및 구매확대